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가. 개요

- 주 제: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
- 일 시: 2023년 11월 1일(수) 14:00~17:4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기조연설]

[발표] Serdar Yilmaz 세계은행 공공재정·조달 부문 프랙티스 매니저

[주제발표 I]

[발표1] Andreas Bergmann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교 교수

[발표2] Scott Showalte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II]

[발표 1] 한동숙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발표 2] 심규헌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발표 3] 정기종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부장

[발표 4] 이지현 국민연금공단 책임운영역

[종합토론]

[좌장]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김수영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박혜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경제조정국 서기관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지원센터장

이보화 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 파트너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공공기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일(수)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이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후원으로 개최한 올해 국제심포지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였던 과거 행사와 달리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특히, 올해 국제심포지엄에는 국제기구, 학계, 정부, 유관기관 및 회계전문가 등 현장과 온라인으로 총 242명이 참석하였다.

2050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ESG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가운데,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를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로 선정하여 공공부문 기후 관련 ESG 보고 기준 개발과 ESG 보고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및 관련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기준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주대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과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이어 세다르 일마즈(Serdar Yilmaz) 세계은행 공공재정·조달 부문 프랙티스 매니저의 기조연설과 2개 세션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다르 일마즈(Serdar Yilmaz) 세계은행 공공재정·조달 부문 프랙티스 매니저가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ESG 보고를 주제로 공공부문 ESG 보고의 중요성과 관련 도전과제 및 정책제언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였으며, 주제발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드레아스 버그만(Andreas Bergmann)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교 교수가 공공부문의 특성과 보고실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재무보고 기준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어 스콧 쇼월터(Scott Showalte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교수가 미국 공공부문의 ESG 보고 지침 및 시사점을 주제로, 미국 공공부문 회계기준 수립 기관의 ESG 보고 지침 논의 동향을 설명하고, 공공부문 ESG 보고 기준 마련 시 기준제정기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동숙 충남대학교 교수가 ESG 공시와 평가제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ESG 공시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보고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공단이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ESG 경영 추진 체계와 기후 관련 ESG 보고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수영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박혜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경제조정국 서기관, 이용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센터장 및 이보화 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제도상 문제점과 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과 협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으며, 민간분야와는 별도의 공공부문 ESG 보고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특히, 보고 기준 마련 시, 국제기구(IPSASB)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면서, 기관별 고유 사업, 수익구조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 비용 및 혜택을 고려한 실익 측면의 공시 항목 규정 및 기존 공개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웹 국제심포지엄 전체 영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문) <https://www.youtube.com/watch?v=1IUVDhpTU1k&t=130s>

(영문) <https://www.youtube.com/watch?v=4CpYe59Wcb4&t=1256s>

나. 발표자료 주요 내용(요약)

[기조연설]

발표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ESG 보고
(Serdar Yilmaz 세계은행 공공재정·조달 부문 프랙티스 매니저)

● 공공분야 ESG 보고의 중요성

- 급변하는 기후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면서 투자자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민간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ESG 정보 보고를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시민, 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분야의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대한 기여 등과 관련한 ESG 정보의 요구가 증대됨

● 공공분야 보고실체의 핵심적인 특성

- 보고실체는 세금 수취나 자본시장 대출 등으로 구성원으로부터 자원을) 조달하고, 구성원에게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함
- 기후 관련 정보를 포함한 재무보고 책임이나 의사결정 목적으로 실체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이용자와 자원 제공자가 존재함

● 공공분야의 보고실체 정의 관련 도전과제

- 공공부문은 큰 규모와 복잡한 위계질서 등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고실체의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의 정보 공시 규제가 미약함
- 국가 차원에서 취합된 정보는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개별 정부 부처, 기관, 프로그램별 정보 보고가 유용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세계은행의 활동

-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후변화와 개발 고려 사항을 통합하는 핵심 진단보고서로 국가기후개발보고서(CCDRs)¹⁾ 평가를 추진 중이며, 캄보디아 보고서 평가를 통한 ISSB 기준 도입 제언 공유
 - 지속가능성 국제 재무보고 기준의 단계적 이행 및 보고실체의 점진적 공시 참여
 - 중대성 중심의 접근법 권고 및 이해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우선 공유
 - 베이스라인 지표 수립, 데이터 가용성 개선 및 공유 증진
 - 정보 작성 템플릿과 지침 제공을 통한 보고의 간소화 및 일관성 추구
 - 역량 강화 지원 및 협업과 동료 학습을 통한 기관별 전문성 강화 등

● 정책 제언

- 지속가능개발 요소를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및 보고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각국 정부 간 협업 필요
- 공공기관의 전문지식과 제도적 역량 함양을 위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니셔티브 설계 및 이행
- 공공부문 회계 개혁과 성과감사를 통한 학습 및 활용 등

1) 국가기후개발보고서(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s: CCDRs)

[주제발표 I]

발표 1

공공부문 특성과 보고실체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속가능성 재무보고 기준 개발
고려사항(Andreas Bergmann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교 교수)

● ESG 공시기준 동향

- (GRI) 1989년, 미국의 대형 유조선의 원유 유출 사건을 계기로 1997년에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가 설립되어 기업에 책임 관련 보고를 촉구하였으며 기준은 공통, 부문별 및 주제별 등 세 가지로, 이중중대상 접근법 채택
- (IFRS S1, S2)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요구사항이고, S2는 기후 관련 공시이며, 재무적(단일) 중대상만을 고려하고, 보고실체는 재무제표와 동일
 - S1의 보고 범위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이고, S2는 기후 관련 물리적·전환위험 및 기회이며, 공시 항목은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동일
- (EU CSRD) 비재무적 보고 지침이 적용되는 상장기업이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 등에 적용되며, IFRS와 달리, 이중중대상 접근법을 채택. 2023년 7월,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12개 지침을 승인하였으며, 2024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 예정
- (IPSASB) 2023년 5월, RPG 1(실체 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 보고), RPG 3(서비스 성과 정보의 보고) 개정안 공개, 기준 제정 작업 착수 결정(6월),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 브리프 승인(6월), 2024년 하반기 중 공개초안 공개 및 2025년 최종 기준 발표 계획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 공시를 위한 공공부문 특성

- (공공부문 특징) IPSASB 개념체계 서문에 기술된 공공부문 특성 대부분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적용되나, 규제적 역할 특성의 경우 명확화 필요
 - 공공부문의 특성은 비교환 거래, 승인 예산, 공공부문 프로그램의 성격 및 지속성, 자산과 부채의 성격 및 목적, 규제적 역할, 국제기준 재정통계와의 관계 등 6가지로 정의됨

- 파리협약 채택으로 개별 정부기관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보고가 필요하므로, 실체의 규제적 역할의 특성에 공공부문 보고실체는 주체별 특정 활동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를 포함하는 보고 의무를 지니는 것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사례조사) 영국, 뉴질랜드 및 스위스²⁾ 등 국별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국가 규제는 IPSASB 개념체계의 공공부문 특성을 명백히 고려하지 않으며, 반영 수준 또한 상이함
 - (영국) 재무보고서 내에 지속가능성 재무정보(6장)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 범위는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임. 녹색정부협약(Greening Government Commitments)³⁾과 국가재무보고매뉴얼(FreM) 등의 국가 규제는 IPSASB 개념체계의 공공부문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FreM은 IFRS 개념체계(4.2.2.)만을 고려
 - (뉴질랜드) 기후 경제 및 재정 평가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 범위는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임. 비영리목적실체(Public benefit entities: PBE)의 재무보고에 적용되는 비영리목적실체(PBE) 개념체계는 IPSASB 개념체계의 공공부문 특성을 반영하고,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은 이를 고려하지 않으나, 기후 관련 공시 보고실체는 재무보고 실체와 동일하므로 암묵적으로 공공부문 특성을 고려한다고 판단
 - (스위스)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으며, IPSAS RPG1(RPG 1.15)에 따라, 통계부문에 기반한 일반정부부문(GGS)을 중점으로 보고

2) IPSAS와 발생주의 회계를 활용하고,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를 이행하는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3개국 사례 분석 진행

3) 녹색정부협약(Greening Government Commitments: GGC)은 영국 정부 부처 및 협력 기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의미함.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reening-government-commitments-2021-to-2025/greening-government-commitments-2021-to-2025>, 검색일자: 2023. 12. 19.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 공시를 위한 보고실체 특징

- (보고실체 특징) IPSASB 개념체계에 따르면, 보고실체는 구성원으로부터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자원을 조달하고, 구성원들의 혜택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함. 또한, 보고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존재해야 하며, 보고실체는 단일 혹은 그룹으로 구분됨
- (국가별 보고실체 특징) 지속가능 보고 목적의 보고실체 개념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지속가능 보고 기준 마련 시 보고실체에 대한 명확화 필요
 - (영국) 일반정부부문(GGS)과 국가재무보고매뉴얼(FreM)은 그룹 보고 실체를 정의하나, 일반정부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단일 보고실체를 정의함. 그룹 및 단일 보고실체는 IPSAS 보고실체 요구 조건을 충족
 - (뉴질랜드) 재무보고와 동일한 그룹 보고실체이나, 보고실체 및 전체 국가 차원 보고 등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함
 - (스위스) IPSAS RPG1(RPG 1.15)에 따라, 통계부문에 기반한 일반정부부문(GGS)을 중점으로 보고

● 정책 제언

- 지속가능성에 대한 광의의 접근을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고려
- GRI나 CSRD 같은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제언
- 이중중대성 접근법 권고
- 지속가능 보고 반영을 위한 개념체계 및 서문 재정비
- 국가별 법적 보고 의무로 인한 전체 경제 상황 반영을 위해, 전체 국가 차원과 보고실체 보고 간의 관계 규명 및 전체 국가 및 보고실체 모두에 대한 정보 공시 고려
- 스위스는 RPG1을 기반으로 보고실체를 일반정부부문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므로, 보고실체 정의 검토

발표 2

미국 공공부문의 ESG 보고 지침 및 시사점
(Scott Showalte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교수)

● 미국 공공부문 회계기준 수립 기관(FASAB 및 GASB)의 활동

■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의 활동

- 2022년 5월, 기후 관련 재무보고에 적합한 연방재무회계기준에 대한 Staff Paper⁴⁾를 공개하여, 기후 관련 사건 혹은 위험에 대한 보고와 회계처리에 적용 가능한 FASAB Statement를 소개하고, ESG 위험이 자산, 부채 및 기타거래 등 재무회계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
- 최근, IFRS S2 기반으로 기후 관련 재무보고를 개선하자고만 언급

■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의 모니터링 활동

- 2022년 5월, 정부회계기준과 ESG 요소의 교차점에 대한 White Paper⁵⁾를 공개하여 ESG 세 가지 요소별 회계책임성을 평가하였으며, 기준 제정기구들의 ESG 보고 지침 논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환경 크레딧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 개발을 고려 중

- GASB와 FASAB 모두 IPSASB처럼 기후 관련 ESG 공시기준을 발표할 계획은 없으며, 일반적인 재무보고를 할 때, ESG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

● IPSASB 역할

- GRI와 IFRS S1, S2 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마련 연구를 추진 중임

4) FASAB, "Statements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hat May Be Relevant to Climate-Related Financial Reporting," https://files.fasab.gov/pdf/finance/finance_related_fin_reporting_staff_paper_2022.pdf, 검색일자: 2023. 12. 19.

5) GASB, "Intersec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tters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https://gasb.org/document/blob?fileName=ESG%20Memo%20FINAL%2005312022.pdf>, 검색일자: 2023. 12. 19.

● 공공부문 ESG 보고 기준 마련 시 기준 제정기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성

- ESG 기준 제정 권한
 - 개념체계 및 거버넌스 문서 규정과 일관된 방식으로 ESG 관련 보고 기준을 수립할 권한 필요
- ESG 보고에 포함되는 정보 유형
 - ESG 관련 정보와 연관된 위험 및 기회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반영 필요
- ESG 관련 정보의 기존 개념체계 적용 여부
 - 재무제표 등에 ESG 정보를 반영하거나 보완을 위해 개념체계 변경 및 확장 가능성 존재
- 이중중대성과 측정 기준에 대한 지침 제공
 - ESG 관련 정보 보고 범위 설정에 있어 중대성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며,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 인식·측정·보고 기준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개념체계에 반영 필요
- ESG 정보의 위치
 - ESG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측정 정보에 따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재무상태표, MD&A 등)와 기타 보고서 등에 표기될 수 있으며 일률적인 지침은 없음

[주제발표 II]

발표 1 공공부문의 ESG 공시와 평가제도 구축 방안(한동숙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공공기관의 ESG 관련 보고 현황

-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동
 - 공공기관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ESG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기관의 ESG 전략 및 과제 심의, 성과평가, 위험 검토 및 ESG 경영 관련 의사결정 추진
 - 규모가 큰 공기업들은 연례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와 사회적 가치 실현 보고서 등을 발간, 세계의 주요 공적연기금은 투자 대상 기업에 ESG 경영 전환 요구

- ESG 공시 프레임워크
 - 공공기관이 연계된 중앙집권적인 공시시스템(ALIO)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4회 공시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공시 항목을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기준 개정
- ESG 관련 통합공시 항목의 개정
 - **(환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사용량 등의 환경보호 항목 추가 및 Scope 3까지 점진적 확대 공시 등
 - **(사회)** 정보보호, 인권 및 동반성장 평가에 대한 정보 공시 확대 등
 - **(지배구조)**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내부 감사 부서 현황과 청렴도 평가 결과 항목 추가 등
 - **(카테고리)** ESG 공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4개 카테고리로 조정
 - * (변경) 기관 운영, ESG 운영, 성과 관리, 대내외 평가 등 4가지
 - 일관적인 공시 항목 요구는 부담이 크므로 의무적 공시 항목과 자율적 공시 항목으로 구분
-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ESG 관련 요소를 포함하며, 평가 결과는 공시되어 있고, 성과보너스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침
 - 환경 분야 지표는 사회적 책임 지표의 안전 및 재난관리, 친환경·탄소중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3개 세부 지표로 구성

● 정책 제언

- 공시 및 평가 시스템은 개별 기관 활동의 집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회계책임성 실현
- 초기에 개발된 지침은 영구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개선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며 활용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 국내외적으로 논의된 기준에서 거시적 수준의 용어 간 일관성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발표 2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 현황(심규현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 ESG 경영정보 공시

- 한국가스공사는 상장기업으로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ESG 관련 정보를 ALIO 시스템에 통합 공시하여 정부 정책을 이행함

● ESG 경영 추진체계

-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은 9개 단계로 구성
 - * (1) 이중중대성 평가 + (2) 벤치마크(갭분석) → (3) 목표 설정 및 전략과제 정립 → (4) 의견수렴 → (5) 이행과제 발굴·ESG 추진계획 수립 → (6) 실행 → (7) 공시⁶⁾·공개 → (8) 평가⁷⁾ → (9) 성과분석 및 환류
- 이중중대성 평가
 - 공사와 관련성이 높은 ESG 이슈 풀을 구성하여, 환경·사회적 영향도와 재무적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공사와 관련된 ESG 핵심 이슈를 도출
 - * (절차) ESG 이슈 풀 구성 → 이슈 풀 영향도 평가(환경, 사회, 재무) → 이슈 풀 순위화 → ESG 핵심 이슈 선정

● 기후 관련 ESG 보고

- 기후 관련 ESG 정보를 ALIO 통합공시 시스템에 공시하고,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별도 발간하며, 한국거래소에 자율공시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요 공시 항목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용수사용량, 환경법 및 규정 위반 현황,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추진 계획, 기후변화 대응 조직·위험관리·대응전략,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대기 및 수질오염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량, 생물다양성 평가 현황, 친환경 구매 현황 등이 있음

6) 한국거래소, 알리오, 홈페이지 공시

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한국ESG기준원, MSCI 등

■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대응

- **(위험관리)** 위험 식별, 위험 규명, 위험 평가, 위험관리 등의 4개 단계로 진행하며, 먼저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위험을 식별하고, 화석연료 규제 강화 등의 구체적인 위험을 규명한 후, 중대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식별·평가된 위험에 대해 각 부서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는 위험관리 절차로 진행
- 중대성 평가를 통해 특정한 잠재적 위험·기회를 파악하고, 위험·기회별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함

발표 3 한국지역난방공사 ESG 정보공시 사례 발표(정기종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부장)

● ESG 경영체계 수립

- 공공기관 및 상장사로서 정부 및 자본시장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체계를 수립하여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ESG 경영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
 - **(경영전략)** ‘환경과 사람을 향하는 ESG 리더’ 비전 달성을 위해 (E) 청정 미래환경 조성, (S) 안전·포용 사회 구현, (G) 지속가능경영 선도 등의 3대 전략방향과 이에 따른 12대 전략과제 및 6대 핵심 KPI⁸⁾를 설정
 - **(추진조직)** 위원회로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조직으로 ESG 전담조직 및 협의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

● 지속가능경영공시

- 2007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12년)을 시작으로 UNGC COP 보고서(2013~2019년), 사회책임경영보고서(2017~2019년)를 거쳐 현재 ESG 보고서(2020~2022년) 발간

8) 핵심성과목표 2026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A등급, 일자리 창출 3.5만명(누계), 종합청렴도 1등급, 탄소배출 원단위 4.1% 감축, 안전관리등급 1등급, 국민소통지수 92점

● 이중중대성 이슈 도출

- GRI Standards 2021 도입에 따라 이중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도입, 리스크 관리가 중점이었던 기존 평가방법론을 확장하여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고려한 이슈 도출

■ 평가 프로세스

- (1) ESG 풀 구성: 국제표준, ESG 평가 지표 및 트렌드 등 분석을 통해 31개 이슈풀 구성
- (2) 영향분석: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검토, 미디어·벤치마킹 분석 등을 통한 사회·환경적·재무적 영향분석 수행
- (3) 10대 중대 ESG 이슈 선정: 이슈별 사회·환경적 영향도와 재무적 영향도를 계량화하여 종합평가 실시 후 10대 중대 ESG 이슈 선정

* (기후 관련 이슈)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설비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열에너지 저탄소 인증 등 ESG 탄소중립 기여, ESG 환경경영 강화,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적의 자원 수급 및 운영 등

■ 평가 프레임

-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관련도 평가)로 다양한 이슈가 공사에 관련되었는지 평가하고, 2단계(중요도 평가)로 관련 이슈가 공사와 이해관계자에 중요한 정도를 평가함

발표 4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과 기후변화(이지현 국민연금공단 책임운영역)

● 일반 현황

- 2021년 3월, 글로벌 책임투자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121.3조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책임투자원칙(PRI) 서명 기관도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3,826개 이상을 기록

-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이행원칙은 ESG 투자와 주주권 행사로 구분되며, 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종류	정의	이행 여부
ESG 투자	ESG 통합	재무적 요소와 ESG 등 비재무적 요소 함께 고려	이행
	스크리닝	ESG 관점에서 긍정·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특정 산업군을 투자후보군에 포함·제외	이행 예정
	테마투자	위험조정수익과 ESG 성과를 동시에 추구	미이행
주주권 행사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이행
	주주활동	비경영참여 주주활동(기업과 대화 등), 경영참여 주주활동(주주제안 등), 소송 제기	이행

● 주요 활동 내용

■ ESG 통합 전략

- 기업별 ESG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 채권(회사채 등) 직접 운용 시 ESG 평가 결과(점수, 등급 등)를 투자가능종목군(IU) 신규 편입 및 투자종목 점검 등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함

* 평가체계는 14개 항목과 61개 지표로 구성되며, 기후변화 항목으로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에너지 사용량 평가 등이 있음

■ 주주활동(중점관리 사안)

- 지분율 5% 또는 보유비중 1% 이상인 국내 투자기업에 대해 중점관리 사안별*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주주활동 수행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

* (기후 관련 중점관리 사안)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안

* (대상 기업 선정기준) 기후변화 관련 사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중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온실가스 배출 관련 ESG 평가지표 등 고려)

- 주주활동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및 후속조치를 수행함

주주활동	상세 내용
비공개 대화	사실관계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을 위한 비공개 서한 발송 및 비공개 면담 수행
비공개 중점관리	개선이 없는 경우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여 비공개 대화 수행
공개 중점관리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중 개선이 없는 경우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명단을 게시하고 비공개 대화 수행
후속조치	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연도 말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절차 추진

■ 해외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활동

- 환경 이슈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해외 기관 투자자와의 교류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AIGCC) 가입

[종합토론] 공공부문 ESG 보고 기준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논의

김수영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과장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소개

-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달성 선언 후, 2021년 5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음 해 1월부터 법안을 시행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

-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4대 핵심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적용대상은 2023년 예산 기준 288개 세부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11.9조원에 달함

* (1)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및 탄소흡수원 확대, (2) 탄소중립 유망기업 인력 양성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3)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탄소중립 국민인식 제고, (4)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지원과 정책적 기반 조성

- 이 중 정량사업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예상량은 2023년까지는 336만톤이며, 2030년까지는 2,871.7만톤으로 추정됨

■ 2023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은 2024년 결산 과정에서 달성도 점검 예정

- 달성도 점검을 위해 결산서에는 연도별 감축량 등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산정식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2023년 11월부터 결산서 작성 준비를 시작하여, 11월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지침을 송부하게 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결산서 작성 교육 등 지원 업무를 수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는 2024년 4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2024년 5월 국회 제출 예정

-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의 문제점
 - 결산 전문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처의 과다 추계 논란
 - 제도적 한계로는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2023년 9월에 기후인지 예결산으로 포괄적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법안 제출
- 선진국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 많으며, 내년 결산 결과와 평가 역시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함

박혜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서기관

- 공공기관 ESG 공시의 의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국가 간 협약으로 강제되어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가이드 역할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하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활동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지와 책임 필요
- 공공기관의 ESG 정보공개 수단으로 정부의 ESG 공시지침 마련 필요
 - 정부가 올해 2월, 통합공시기준을 전면 개편하여 ESG 경영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및 추진체계를 ESG 경영보고서의 형태로 공시하도록 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Scope 3(기타 간접배출)까지 점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음
 - 이에 정부는 ESG 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Scope 3 측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의 ESG 공시기준 마련 시, IPSASB 등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살펴면서 다양한 기관 성격 및 고유 사업 등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특수성 고려 필요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347개 기관과 지방공기업 410개, 지방출자출연기관 856개 등 1,600여개에 달하며, 기관의 고유 사업, 수익구조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기업은 공공성과 시장형 기업의 특성을 모두 지니므로 이러한 기관에 대한 공시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에너지, 금융 및 연구 분야 등 공공기관의 고유 사업이 각기 달라, 기관별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별 중요도는 상이하나, 현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므로 기관별 중요도가 다른 과제나 성과가 제대로 공시되지 못함
- 앞으로 추진될 ESG 경영보고서를 통해 각 기관의 중요한 ESG 경영활동이 제대로 공시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관 간 ESG 관련 보고서 작성 수준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한 상호 협력 필요
- 민간에서 논의되는 공시기준과 다양한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이중중대성 등 민간 기준과는 달리 적용되고 추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도출 필요

이윤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경영센터장

- 우리나라 ESG 공시기준 제정 현황
 -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의 중이며 아직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ESG 기준 제정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국제 정합성을 갖추되,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KSSB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임
 - ISSB 기준은 글로벌 베이스라인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토대로 국가·산업별 이슈, 비용·혜택, 데이터 가용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 가능성을 고려 중
- 공공부문 기후 공시기준 제정
 - 공공과 민간 간 기후 공시기준의 차이는 없으며, 민간 기준에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적용하면, 공공부문의 기후 공시기준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
 - 10월 중, 호주에서 IFRS S2를 기반으로 법인의 고유 목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 정보 등의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 관련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영리기업뿐 아니라 비영리기업에도 적용됨
- 공공부문의 가치사슬 정보 공시에 대한 고민 필요
 - 기업의 가치사슬은 1~2차 변동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나, 공공부문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100% 정부출자 비영리기관 중 보고실체 차원에서 가치사슬의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자발적 공시로 규정 필요

이보화 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 파트너

- 공공부문 ESG 보고 지침 관련 시사점
 - 공공기관이 정보 공시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지침과 템플릿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시장형 공공기관은 KSSB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준시장형 및 기타 공공기관은 별도 기준 적용 필요
 - 특히, 제조시설보다 주로 오피스 형태를 띠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대상 물리적·전환위험에 대한 재무적 영향 측정은 적절하지 않고, 가치사슬 측정 비용도 과다하므로 실익 측면에서 필요한 공시 항목 고려 필요
 - 알리오 통합공시시스템 등 기존의 정보 공시 항목을 고려하여 ESG 공시 정보를 마련 필요
- 공공부문 준비 사항
 - 특히 시장형 공기업들은 재무제표 기준의 연결정보 공시, 재무제표 분석 정량화⁹⁾에 대한 고도화 및 ESRS first set 기준에 따른 이증중대성 평가 수행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공공부문의 민간부문 ESG 정보 공시 지원 필요
 -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정보 공시를 지원하며, 공공부문의 지원 정도에 대한 공시 또한 필요함. 또한, 기업 입장에서 CBAM¹⁰⁾ 영향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며, CBAM 인증서 가격 제공 등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필요

9) TCFD 체계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물리적·전환위험 및 기회를 재무적 부분으로 정량화

10) EU Fit for 55의 핵심인 탄소국경조정제도로 EU에 수입되는 제품 중에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

참고 국제심포지엄 행사 사진

